

##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BS금융경영연구소 신 성 수석연구위원 (seong-shin@bsfng.com)  
BS금융경영연구소 염지연 책임연구위원 (yeomji00@bsfng.com)

2000년대 들어 동남권지역에서 청·중년층(20~49세)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가 청년층의 역외유출, 베이비부머의 50대 연령층 진입등으로 감소함으로써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이 전체 고용의 87.2%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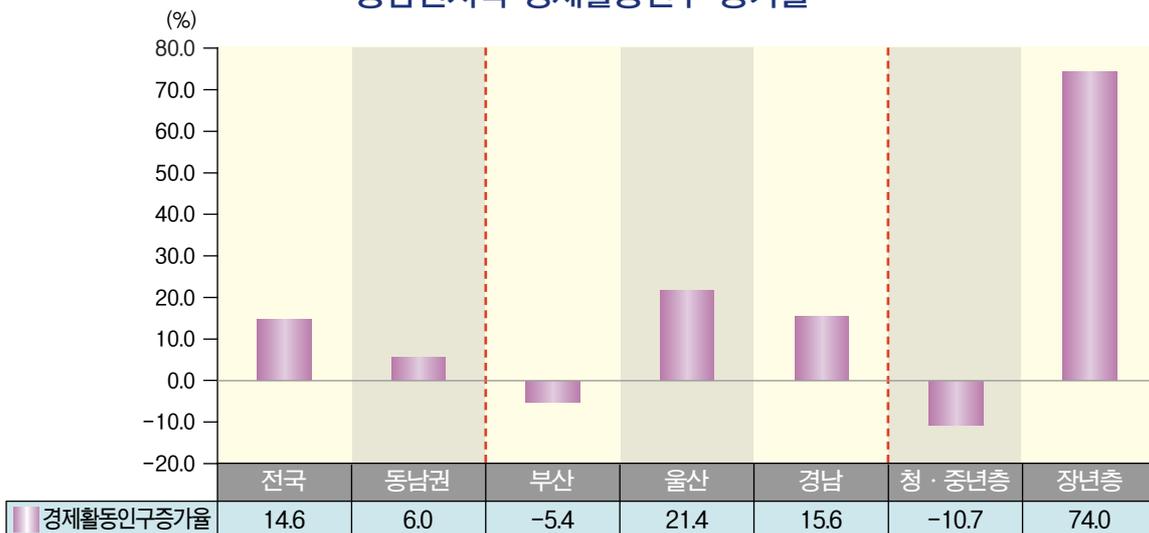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의 급속한 저하로 지역경제의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 동남권지역에서는 생산 및 고용비중이 높은 제조업에 대한 청년들의 취업유인을 높이고 창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청년고용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창업 및 기업이전 절차 간소화, 이전 공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도 지역의 고용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동남권지역 청·중년층 경제활동인구 2000년 이후 크게 감소

20~64세<sup>1)</sup> 연령층의 동남권지역 경제활동인구<sup>2)</sup>는 2000년 3,399천명에서 2013년 3,604천명으로 6.0%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1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장세를 보였다. 더욱이 20~49세(청·중년층)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중 10.7% 감소함으로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의 50대 연령층 진입에 따른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울산 및 경남지역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같은 기간중 전국을 상회하였으나 부산지역에서는 5.4% 감소하였으며 청·중년층의 경우 2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산의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이외에도 김해, 양산, 울산지역 등 부산인접지역의 산업단지 증가로 관련 노동인구가 이전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남권지역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주 : 1)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13년 증가율

2) 청·중년층과 장년층의 증감률은 동남권지역 기준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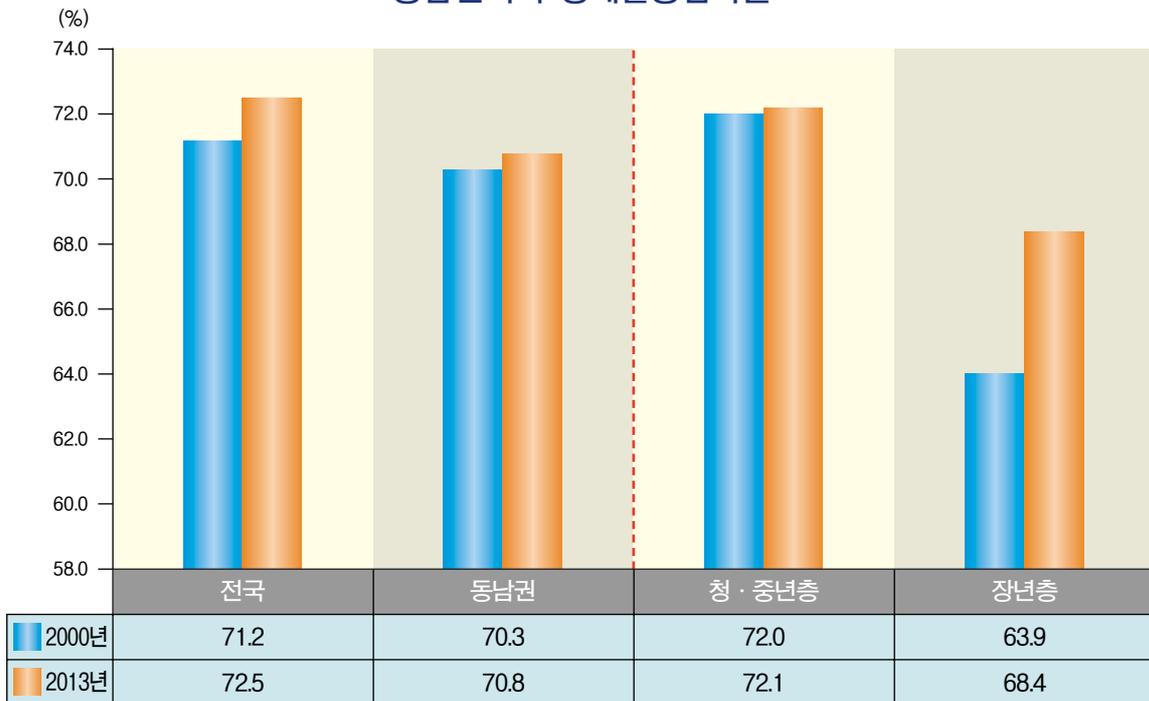
1) 진학, 취업준비, 군복무 및 국민연금수령 연령층을 감안하여 20~6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분석함

2) 15세 이상 인구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며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전업주부, 재학생,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이 포함됨

20~64세 연령층의 동남권지역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인구)은 2000년 70.3%에서 2013년 70.8%로 소폭 상승하였는데 50~64세(장년층)의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전국과 비슷한 모습이다. 청·중년층에서는 특히 20~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sup>3)</sup>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대학진학률의 급속한 상승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의 2013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의 72.5% 대비 1.7%포인트 낮다. 부산과 울산지역이 전국을 하회하고 경남지역은 전국 경제활동참가율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동남권지역 경제활동참가율



주 : 청·중년층과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동남권지역 기준  
자료 : 통계청

3) 동남권의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7.8%에서 2013년 43.8%로 14.0%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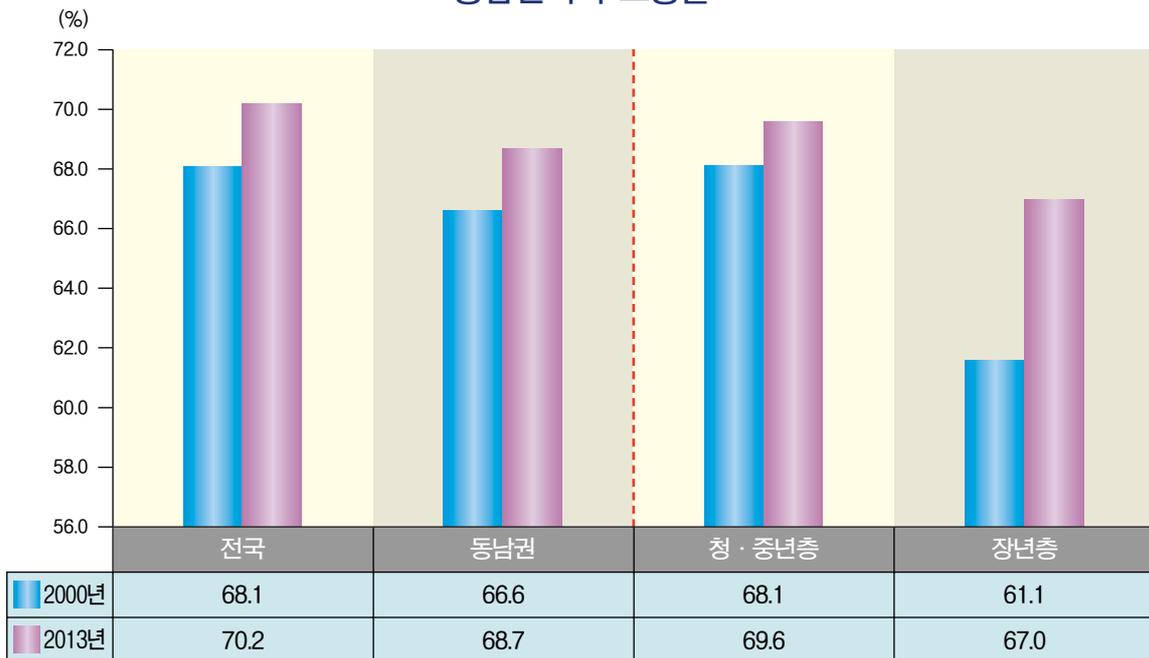
## 동남권지역 청·중년층 취업자수 크게 감소

20~64세 취업자수는 2000년 3,221천명에서 2013년 3,494천명으로 8.5% 늘어났으나 청·중년층의 경우 230천명 감소하였다. 그 결과 취업자중 청·중년층의 비중이 2000년 80.0%에서 2013년 67.2%로 크게 낮아졌다.

동남권지역 고용률(취업자수/15세이상 인구)은 2000년 66.6%에서 2013년 68.7% 상승하였으며 동 변화폭은 전국과 같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이 청·중년층보다는 장년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3년 기준 동남권의 고용률도 전국보다 낮는데 경남지역은 전국의 고용률을 상회하고 있다. 5세 구간별로 보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전국과 1~2%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20~24세 구간에서는 3.2%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동남권지역 고용률



주 : 청·중년층과 장년층의 고용률은 동남권지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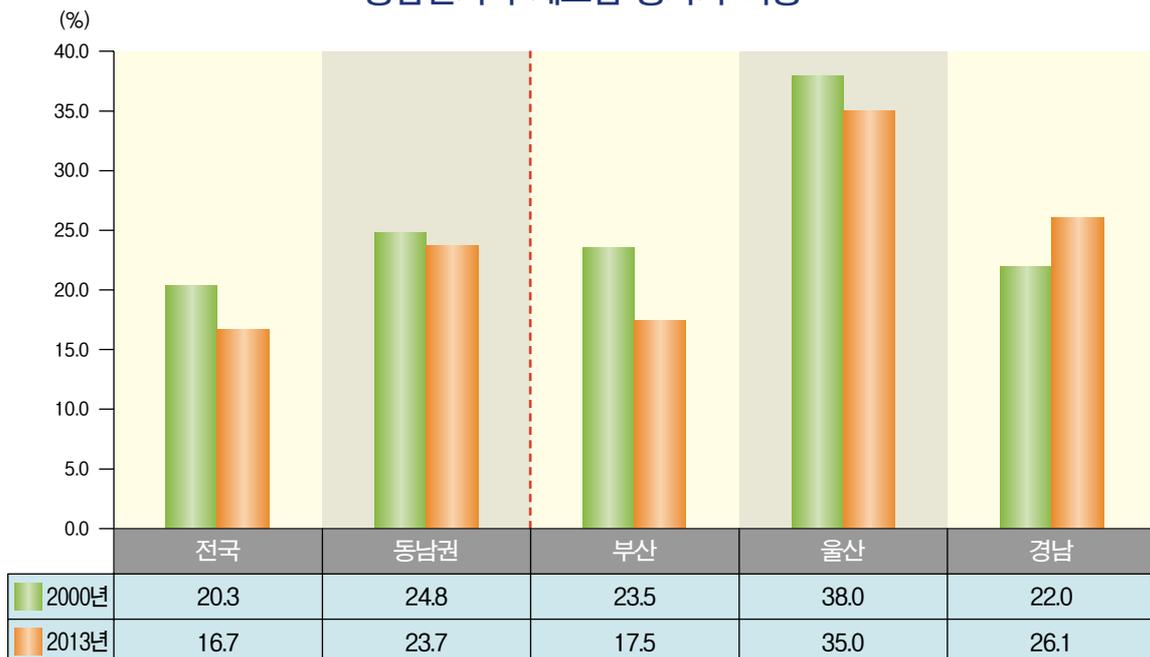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동남권지역 제조업이 고용에서 큰 비중 차지

동남권지역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0년의 24.8%에서 2013년 23.7%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취업자의 약 1/4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중 전국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3%에서 16.7%로 크게 낮아졌다. 동남권중에서 대도시인 부산 및 울산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으나 경남지역에서는 동 비중이 오히려 4.1%포인트 상승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을 보면 울산이 35.0%로 매우 높고 경남도 전국 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산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17.5%로써 전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동남권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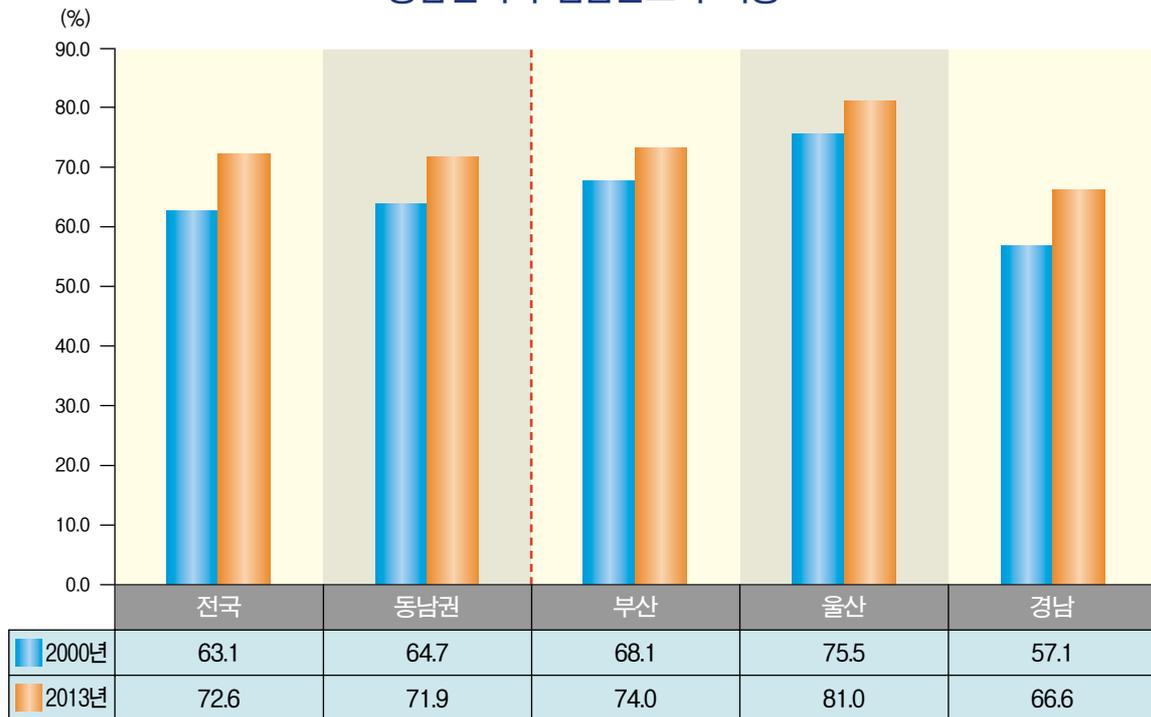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부산 상용근로자 비중 매우 낮아

동남권지역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0년 64.7%에서 2013년 71.9%로 크게 상승하여 전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울산 및 경남지역 모두 임금근로자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동남권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전국보다 다소 낮다. 이는 경남지역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상당히 낮는데 기인한 것이다.

동남권지역 임금근로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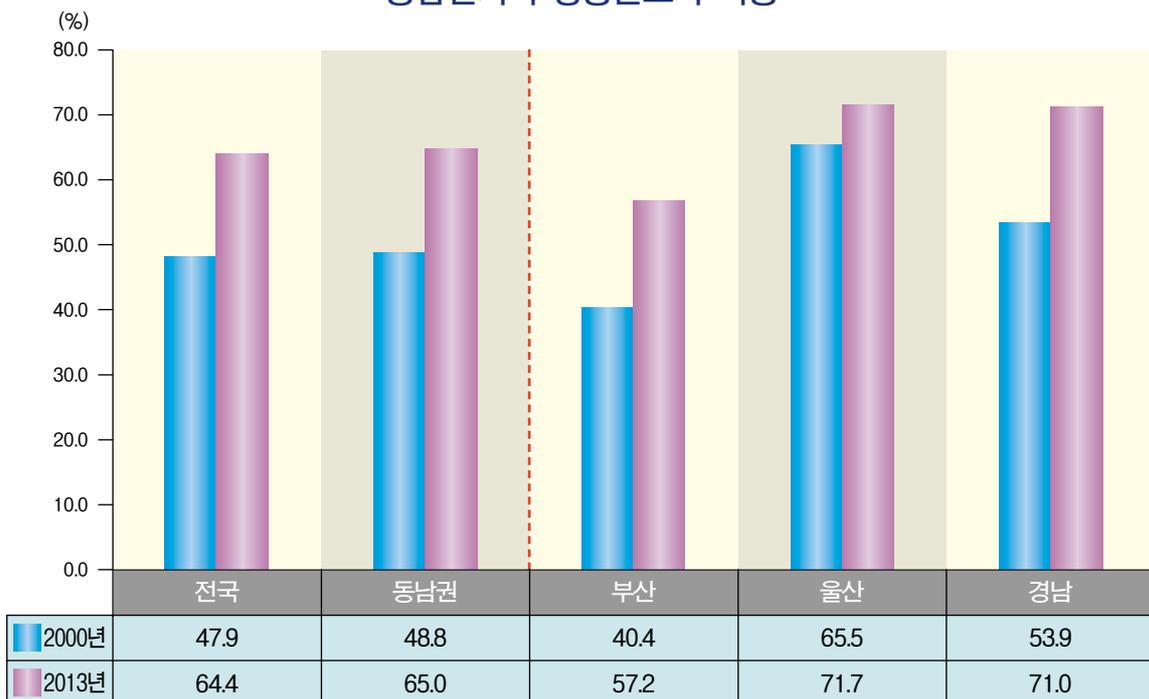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임금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로 구분해 보면 동남권지역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2000년 48.8%에서 2013년 65.0%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동남권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며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동남권 상용근로자 비중은 전국보다 다소 높는데 울산 및 경남지역은 71%를 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57.2%로 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지역 상용근로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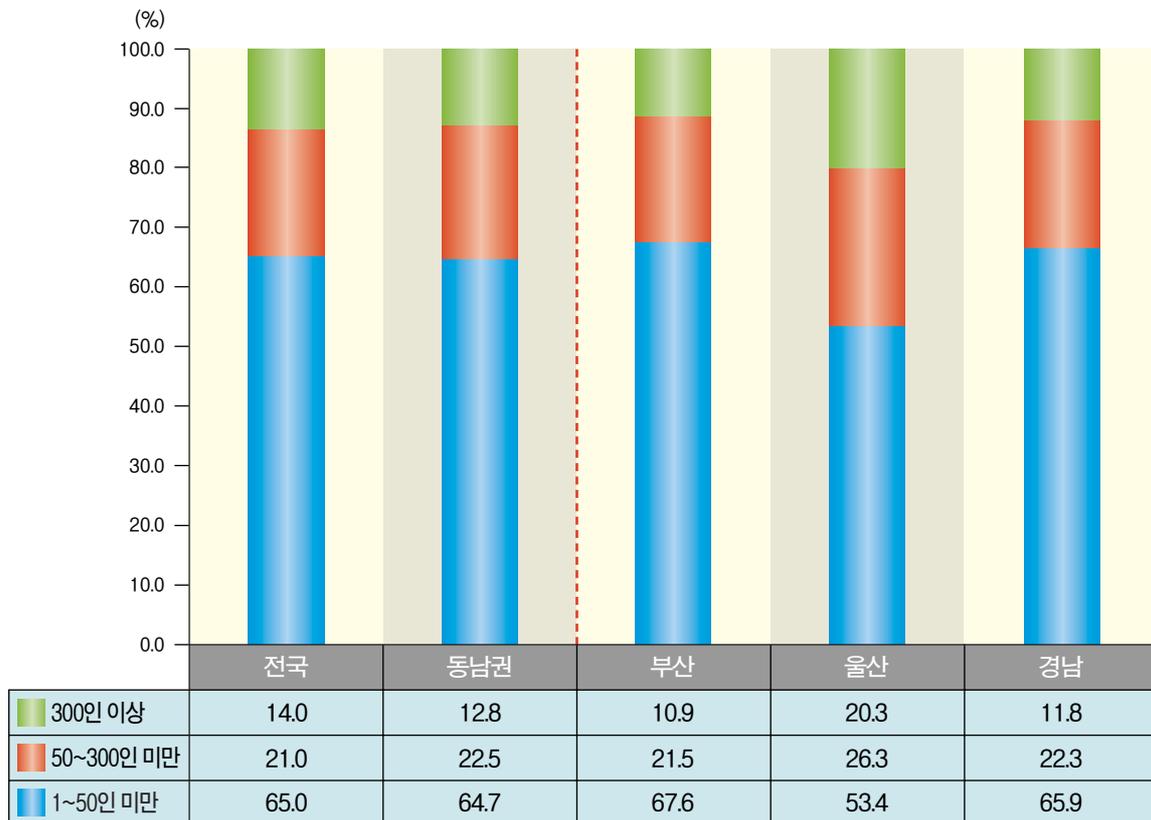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고용의 65%를 1~50인 미만 기업이 담당

2012년 종사자규모별 동남권 고용 비중을 보면 30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이 87.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5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이 64.7%에 달한다. 300인 이상 기업 고용비중의 경우 동남권지역이 전국보다 다소 낮는데 대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울산지역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 비중이 20.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지역 종사자규모별 고용 비중(2012년)



자료 : 통계청

## 청년 고용기반 강화

동남권지역의 청·중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가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특히 동남권의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39세 인구가 2000~2013년 중 전국의 경우 11.4% 감소한 데 비해 동남권에서는 19.5%나 줄어들었다. 청년층 노동인구의 축소는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의 급격한 저하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속성장기인 1970년대 및 1980년대 인구의 평균연령은 각각 24.5세 및 27.4세이었다. 또 신흥경제권중에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이어 새로운 고성장 가능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균 연령은 20대 중반 또는 후반이다.

동남권지역 청년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노동연구원 등 보고서(부산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고용정책방안 연구, 2013)에 따르면 2009년 8월 및 2010년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동남권지역의 고교 및 대학 졸업자의 타지역 진출자는 34천명인데 비해 타지역 대학졸업자의 동남권 취업자는 9천여명에 불과하다. “좋은 인재들 대부분이 부산에서 일하며 살고 싶어도 딱히 일할 곳이 없거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수 등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대다수 서울로 올라가는 게 현실입니다.”(BDi포커스, 2014.5.26) 이는 2014년 BDI(부산발전연구원) 청년정책토크에서 나온 이야기로 지역의 현실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청년의 제조업 취업유인 제고)

동남권지역의 지방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권지역의 경우 제조업 생산비중이 45.6%(2012년 부가가치 기준)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의 선순환 구조 형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 비중이 매우 높은 선진국에서도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한국, 독일, 중국 등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들이 비교적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내성이 강했고 제조업의 투자 및 서비스·건설 등 수요창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양질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R&D 파급효과 등을 인식하여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의 생산기지 귀환(reshoring)을 적극 유인하고 있다.

지역의 주력업종인 조선,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 왔으나 최근 후발국의 추격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 인재들이 이들 제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후발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확대하는 첩경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경쟁력 확보의 기본이 되는 부품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들의 취업기피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청년 취업희망자의 의식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고 본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에서 근무환경 및 급여수준이 매우 열악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매력도 부족한 기업이 많다고 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및 고용안정성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방정부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고 대학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의 함양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 분양 및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우 각종 소득세제혜택을 대기업의 2배로 하는 방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소득보전 정책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제력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에도 지방정부가 아이디어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산업단지가 공원같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 협소한 용지 등으로 제약이 많지만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데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청년창업 촉진)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덴마크 Utretch대학의 N. Bosma와 E. Stam의 보고서(Local Policies for High-Employment Growth Enterprises, 2012. 3.28)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중에서도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한 일반적인 청사진(blueprint)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수 OECD 국가에서 창업촉진 정책이 1990년대에는 단순히 창업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업력 5년 이내 기업 중 최근 3년간 고용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벨기에 플란더스(Flanders)지역의 Bryo 사업촉진프로그램(business accelerator programme)을 들 수 있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18~36세 청년에게 지역에서 성공한 기업을 통해 학습기회를 제공하거나 재무, 아이디어의 상업화 및 국제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Davy Kerstens라는 청년이 1페이지 분량의 사업구상(TwitSpark)을 가지고 Bryo를 방문하였는데 7개월만에 미국 실리콘밸리로부터 약 110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Growth Accelerator (Groevierneller) 프로그램에서는 매출액 1~8백만유로 기업을 5년내 20백만유로로 증대하는 목표를 가진 100개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특징은 초기 5년(2009~2013년) 소요재원 6백만유로는 재정에서 출연하였으나 이후 민간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도 민간부문으로 구성된 High-Growth Stars Consortium에서 맡고 있다는 점이다. 동 컨소시움에는 PriceWaterhouseCoopers, Port4Growth, De Baak Management Centrum VNO-NCW, Philips Applied Technologies 및 AKD Prinsen Van Wijnen 등이 참여하였다.

동남권에서도 청년창업 지원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또 성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창업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환경을 만들고 모험적인 청년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재원을 더욱 늘리고 이를 분산투자하기 보다는 잠재력을 지닌 창업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1페이지 분량의 사업구상을 창업으로 완성시킨 Bryo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창업지원센터 또는 프로그램 운영자도 대부분 지역내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성과가 입증된 역외 및 외국의 기관이나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업희망자의 시야를 넓히고 국제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창업 및 기업이전 절차 간소화

영국의 경제전문지 Economist(2014.7.5)에 따르면 미국의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환경평가(small-business friendliness)에서 규제환경이 중요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세제혜택 및 금전지원 방법에 의존하는 기업유치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기업들은 이보다는 간편한 행정절차, 진입장벽 완화 등 기업설립과 관련한 절차를 더욱 중시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기업들의 불만도 세금보다는 주로 엄격한 입지규제, 불투명하고 복잡한 허가절차로 인한 시간 낭비, 과도한 교육 및 경력기간을 요구하는 면허제도, 행정관청의 부정확한 응대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주별 비교를 통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규제완화가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증대 효과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별 조사에서도 간편한 행정절차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지역에서도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고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 이전 공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금년내 수도권 등에서 동남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부산 13개, 경남 11개, 울산 10개로 모두 34개이다. 이들 기관에서 이전하는 인원도 9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 13년간 동남권 취업자수가 연평균 21천명 증가한 것을 감안할 경우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고용증대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이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데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 문현지구에 이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신설되는 해양금융종합센터 등이 관련금융업무의 외연을 확대할 경우 당해 금융회사의 인력 증원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이 높은 다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의 부산 진입도 기대할 수 있다.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업무를 신디케이트대출 중심에서 선박금융채권 보증, 선박펀드 조성 지원, 신디케이트대출 구조화채권 발행 등으로 넓혀 나갈 경우 부산을 중심으로 관련시장이 발전한다. 이후 국내외 기관투자자,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크고 작은 형태로 부산에 거점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며 그 결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 이전도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와 노동인구 연령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 맞벌이 부부 등 이전 공공기관직원 이주의 장애요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민 고용 확대를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협소한 관점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 〈참고〉 동남권 연령구간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 (2013년)

(단위 : 천명, %)

지역구분	연령계층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고용률
동남권	계	5,087	3,604	70.8	3,494	68.7
	20 - 24세	432	189	43.8	173	40.0
	25 - 29세	466	335	71.9	313	67.1
	30 - 34세	591	436	73.8	418	70.8
	35 - 39세	574	422	73.5	411	71.5
	40 - 44세	660	527	79.8	516	78.1
	45 - 49세	651	524	80.5	517	79.4
	50 - 54세	697	530	76.0	522	74.9
	55 - 59세	590	407	69.0	398	67.4
60 - 64세	426	234	54.9	228	53.4	
부산	계	2,276	1,582	69.5	1,518	66.7
	20 - 24세	212	91	42.9	82	38.7
	25 - 29세	219	158	72.1	145	66.1
	30 - 34세	250	181	72.4	171	68.2
	35 - 39세	236	173	73.3	167	70.7
	40 - 44세	271	205	75.6	199	73.3
	45 - 49세	274	219	79.9	214	78.1
	50 - 54세	315	241	76.5	237	75.1
	55 - 59세	286	202	70.6	197	68.8
60 - 64세	213	112	52.6	108	50.7	
울산	계	757	528	69.7	515	68.1
	20 - 24세	58	26	44.8	23	39.9
	25 - 29세	67	51	76.1	49	72.8
	30 - 34세	95	68	71.6	67	70.0
	35 - 39세	91	64	70.3	62	68.3
	40 - 44세	105	82	78.1	81	76.8
	45 - 49세	107	81	75.7	80	75.0
	50 - 54세	105	78	74.3	77	73.8
	55 - 59세	79	52	65.8	51	64.8
60 - 64세	50	26	52.0	25	50.3	
경남	계	2,054	1,494	72.7	1,460	71.1
	20 - 24세	162	72	44.4	68	41.7
	25 - 29세	180	126	70.0	119	66.3
	30 - 34세	246	187	76.0	181	73.7
	35 - 39세	247	185	74.9	182	73.5
	40 - 44세	284	240	84.5	236	83.2
	45 - 49세	270	224	83.0	222	82.4
	50 - 54세	277	211	76.2	208	75.0
	55 - 59세	225	153	68.0	150	66.6
60 - 64세	163	96	58.9	94	57.9	

자료 : 통계청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초우량 지역금융그룹



**BS BS금융지주**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S금융지주(www.bsf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85(범일동)

연락처 : BS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626 Fax : 051-620-3620

이메일 : research@bsfng.com

BS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S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